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43호

「대전광역시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회의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회회의장(참조 : 운영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1, FAX 042-270-5049, E-mail : pooh729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체”를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단체”를 각각 “법인·단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례에 따라 처리”를 “조례를 적용”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원은 안전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 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이하 “대전광역시등”이라 한다)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전광역시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제목“(인사 청탁 등의 금지)”를“(인사 청탁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보”를 “전보·포상·징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 금지) ①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의 제목“(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를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 별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을“(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대전광역시등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대전광역시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신고)”를 “(영리행위 신고)”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 제한)”을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를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를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4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29조의2 및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및 자문내용

제30조의2(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

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대전광역시등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 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의 건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건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b>관련 직무</b>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	-------------------------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	--

  

해당 의원 의견	
----------	--

  

기타 참고사항	
---------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4호서식]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월 일				작성일자 : 년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 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대전광역시회의의원 행동강령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 . .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	--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	--	--	--	--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	--

  

신고자	성명	소 속 위 원 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용역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신고자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상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금품 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 ----- ----- -----법인 · 단체-----.
가. 의안심사, 예산 심의, <u>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u>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u>단체</u>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u>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u> ----- ----- <u>법인 · 단체</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u>단체</u>	다. ----- ----- ----- ----- <u>법인 · 단체</u>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u>조례에 따라</u> 처리할 수 있다.	② ----- ----- ----- <u>조례를 적용</u> ----- -----.

<p>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 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 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 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 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 할 수 있다.</p>	<p>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원은 안전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1호서식에 따 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 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 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 련자인 경우</li> <li>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 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 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li> <li>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li> </ol>
-------------------------------------------------------------------------------------------------------------------------------------------------------------------------------------------------------------------------------------------------------------------------------------------------------------------------------	-----------------------------------------------------------------------------------------------------------------------------------------------------------------------------------------------------------------------------------------------------------------------------------------------------------------------------------------------------------------------------------------------------------------------------------------------------------------------------------------------------------------------------------------------------------------------------------------------------------------------------------------------------------------------------------------------------------------------

	<p><u>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u>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u>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u>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u></p> <p><u>7.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u></p> <p><u>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u>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u>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	------------------------------------------------------------------------------------------------------------------------------------------------------------------------------------------------------------------------------------------------------------------------------------------------------------------------------------------------------------------------------------------------------------------------------------------------------------------------------------------------------------------------------------------------------------------------------------------

<p><u>&lt;신 설&gt;</u></p>	<p>② <u>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③ <u>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④ <u>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⑤ <u>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 제한)</u></p> <p><u>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li> <li><u>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li> <li><u>3. 외국의 정부 · 기관 · 법인 ·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u></li> <li><u>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u></li> </ol>



<p><u>&lt;신 설&gt;</u></p>	<p><u>제8조의2(알선·청탁 등 금지) ① 의원은</u>  <u>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u>  <u>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u>  <u>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u>  <u>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u>  <u>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u>  <u>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u>  <u>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u>  <u>서는 아니 된다.</u></p> <p><u>③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u>  <u>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u>  <u>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u>  <u>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u>  <u>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u></p> <p><u>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u>  <u>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u>  <u>·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u>  <u>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u>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u>  <u>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u>  <u>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u>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u>  <u>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u>  <u>도록 하는 행위</u></p> <p><u>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u></p>
---------------------------	-------------------------------------------------------------------------------------------------------------------------------------------------------------------------------------------------------------------------------------------------------------------------------------------------------------------------------------------------------------------------------------------------------------------------------------------------------------------------------------------------------------------------------------------------------------------------------------------------------------------------------------------------------------------------------------------------------------------------------------------------------------------------------------------------------------------------------------------------------------------------------

	<p><u>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5. <u>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u></p> <p>6. <u>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7. <u>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u></p> <p>8. <u>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u></p> <p>9. <u>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u></p>
<p><u>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u></p> <p>② <u>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u>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u></p>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생략)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현행과 같음)
<p><u>&lt;신설&gt;</u></p>	<p>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u>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u>&lt;신설&gt;</u></p>	<p>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u></li> <li>2. <u>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u></li> <li>3. <u>대전광역시등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li> <li>4. <u>그 밖에 직무관련자, 대전광역시등</u></li> </ol>

	<p><u>의 권리 ·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p>
<p>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u>별지 제1호의2서식</u>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별지 제5호서식</u> ----- -----.</p>
<p>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u>별지 제2호서식</u>에 따라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 ----- -----. ----- ----- ----- <u>별지 제6호서식</u> ----- ----- -----.</p> <p>② ----- ----- ----- <u>별지 제7호서식</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u>별지 제4호의3서식</u>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⑦ ----- ----- <u>별지 제10호서식</u>----- -----.</p> <p>⑧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반환)</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① 의장은 <u>제14조제6항</u>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u>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u>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u></p> <p>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 <u>제1항</u> ----- ----- ----- -----.</p> <p>③ <u>제2항</u> ----- ----- ----- -----.</p>
<p><u>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u>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u>제15조(영리행위 신고)</u> ----- ----- ----- -----<u>별지 제11호서식</u>----- -----.</p>
<p><u>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u>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p>	<p><u>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u>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u>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u>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li> <li><u>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u></li> <li><u>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u></li> </ol>
-----------------------------------------------------------------------------------------------------	------------------------------------------------------------------------------------------------------------------------------------------------------------------------------------------------------------------------------------------------------------------------------------------------------------------------------------------------------------------------------------------------------------------------------------------------------------------------------------------------------------------------------------------------------------------------------------------------------------------------------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	--------------------------------------------------------------------------------------------------------------------------------------------------------------------------------------------------------------------------------------------------------------------------------------------------------------------------------------------------------------------------------------------------------------------------------------------------------------------------------------------------------------------------------------------------------------------------------------------------

<p>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p> <p>① (생 략)</p> <p>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p>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p> <p>2. ~ 4. (생 략)</p>	<p>제17조(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u>별지 제7호서식</u>에 따라 의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 ⑤ (생 략)</p>	<p>제19조(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① ----- ----- ----- <u>별지 제13호서식</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p> <p>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8호서식</u>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u>별지 제4호의3서식</u>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및 처리)</p> <p>① ----- -----<u>별지 제14호서식</u>-----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별지 제10호서식</u>----- ----- -----.</p>

<p>④ (생 략)</p> <p>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u>별지 제9호서식</u>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u>별지 제10호서식</u>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p> <p>4.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별지 제15호서식</u>-----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 <u>별지 제16호서식</u>----- ----- -----</p> <p>4. (현행과 같음)</p>
<p>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u>별지 제11호서식</u>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 ----- <u>별지 제17호서식</u>----- ----- ----- ----- ----- -----.</p>
<p>제6장 <u>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u> <u>설치 등</u></p>	<p>제6장 <u>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u> <u>설치 등</u></p>

제21조( <u>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u> )	제21조( <u>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u> )
제23조( <u>위원장</u> )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u>지명한</u>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u>위원장</u> ) (현행과 같음) ② ----- ----- --- <u>미리 지명한</u> ----- -----.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생략)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u>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u>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  3. ----- <u>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u>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u>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lt;신설&gt;</u>  ② (생략)	4. ----- ----- <u>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u>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u>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u>회피하여야</u>	③ ----- ----- <u>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u>

<p><u>한다.</u></p>	<p><u>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장이 소집한다.</u></p> <p><u>&lt;신 설&gt;</u></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제2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u>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p> <p>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u>제27조의2(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u> <u>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u> <u>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u> <u>다.</u></p>
<p><u>&lt;신 설&gt;</u></p>	<p><u>제29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u> <u>성·관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회의 일시 및 장소</u></li> <li><u>2. 참석위원 성명</u></li> <li><u>3. 회의 및 자문내용</u></li> </ol>
<p><u>&lt;신 설&gt;</u></p>	<p><u>제30조의2(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u> <u>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u> <u>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u> <u>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u> <u>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u> <u>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u> <u>관한 사항</u></li> <li><u>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u> <u>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u> <u>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u> <u>항</u></li> <li><u>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u> <u>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u></li> <li><u>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u></li> </ol>

	<p><u>·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u></p> <p><u>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	---------------------------------------------------------------------------------------------------------------------------------------------------------